

중동 전쟁 관련 해운업계 간담회 개최

- 해운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3월 27일(금) 10시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및 해운선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 해양수산부 차관)을 구성·운영하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등 수출입 물류 영향과 중동 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료비·보험료 급등 등으로 선사의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중동 지역 선박 운항 중단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어 선사 경영 압박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를 직접 만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 선사 피해접수처* 운영 ▲ 운영자금 단기 차입 시 보증 ▲ 한국해양진흥공사 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 (선사당 최대 1,000억원) 등 피해 선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해운협회(oneksa.kr)·한국해양진흥공사(www.kobc.or.kr) 누리집 첫화면에 게시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중소선사는 선박 한 척의 운항 차질만으로도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이러한 선사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해운협회에도 피해신고 창구와 지원방안을 선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해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원배 (051-773-571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51-773-5720)



□ **선사 피해 모니터링**

- 해운협회·해진공 선사 피해접수처 운용(3.9~)
- 해수부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구성·운영(3.11~)

□ **해진공 금융지원방안**

- (운영자금 보증) 선사 운영 자금 단기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
- (유동성공급) 구조혁신펀드(1조원)을 통해 최대 1,000억원까지 단기 유동성 위기 선사의 경영 안정화 지원
- (S&LB* 지원조건 완화)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LTV 비율 상향 (기존 60~80% → 변경 70~90%), 금리 할인 지원
 - * 선사가 보유한 중고선을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선사가 용선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사는 기존 선박을 계속 운용하면서도 매각대금을 통해 유동성 확보 가능
- (정책금융기관 공조 지원) 선사 대규모 자금 필요시(은행의 기존 대출 조기상환 요구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산은·수은: 대출 + 해진공: 보증) 추진